

2019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종 보고서

2019. 1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목 차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3
1. 2019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5
2. 준비 과정	7
1) 프로그램위원회	7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8
3) 사무국	10
3. 프로그램	12
4. 워크샵 세부내용	15
5. 행사 평가	34
1) 참석자 통계	34
2) 만족도 조사결과	34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35
6. 결산	38
7. 사진	39

별첨 1.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19년에 8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IGA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sec@kiga.or.kr)

1. 2019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 주 제 : 지속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 일 시 : 2019년 7월 5일(목), 10:00~17:00
-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태관 BF1
-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비아, GP3 Kore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이버커먼스, 네이버, 사단법인 오픈넷, 카카오,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킹센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법무법인(유) 한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미래인터넷포럼(FIF), 정보공유연대 IPLeft (총 16개 기관)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가비아, 법무법인(유) 한결, 카카오 (5개 기관)
- 홈페이지 : www.krifg.kr
- 참석인원 : 188명(사전등록 166명/264명(88%), 현장등록 22명(12%))
 - 학계 34명(18%), 산업계 33명(18%), 시민사회 28명(15%), 기술계 12명(6%), 공공계 50명(27%), 일반이용자 31명(16%)
- 주요결과
 -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로서의 인터넷이란 3가지 주제의 9개 워크숍,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오픈 데이터 튜토리얼, 인공지능 관련 강좌 진행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망 중립성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워크숍과 정책 공청회가 진행되었음.
 - ICANN 주도의 멀티스тей크홀더 주제 세션이 개최되는 등 해외에서도 워크숍 제안 신청이 이루어짐.

- 아시아태평양인터넷거버넌스아카데미(APIGA) 수료생을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차세대 참여자 양성을 위한 Youth 세션을 처음으로 개최함.
- KrIGF 영상 품질 재고 및 문자 통역 제공을 통해 KrIGF 접근성 개선
- 행사 전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유튜브 채널을 통한 행사 동영상의 아카이브 등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포럼의 홍보 체계화

2. 준비 과정

1) 프로그램위원회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 2019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오병일(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시민사회
 - 박지환, 오픈넷, 시민사회
 - 박복남,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시민사회
 - 이규홍, 히포-팜, 시민사회
 - 김예슬, KAIST, 시민사회
 - 이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이동만, KAIST, 학계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학계
 - 심선영, 성신여대, 학계
 - 이동기, UNIST, 학계
 - 손재원, 고려대학교, 학계
 - 강현수, 기술계
 - 최은필, 카카오, 산업계
 - 이상협, 네이버, 산업계
 -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계
 -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부
 - 이정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2019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15일 : 2019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제33차 회의)
 - 2019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확인
 - 2018 KrIGF 평가 내용 공유
 - 2019 KrIGF 준비일정 및 장소 검토 : 행사 날짜를 7월 5일로 정함.
 - 역할 분담 : Youth 주제(이동기, 손재원 위원), 튜토리얼(박지환, 최은필 위원)
- 3월 29일 :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제34차 회의)
 - KrIGF 장소 후보지 검토
 -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토론
 - AprIGF 및 IGF 참여 논의
 - KrIGF 주제 (전체주제, 기획세션, 워크숍, 튜토리얼) 설문 결과 검토
- 4월 26일 :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제35차 회의)
 - KrIGF 장소 및 일정 확정 : 2019.7.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모집 방안 검토
 -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속기록 작성을 위해 문자통역 도입 방안 검토
 -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토론 : 사전, 사후 홍보 역할 강화
 - KrIGF 생중계 방안 검토
 - 패널 참석비 지급건 : 원칙적으로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되, 지방

- 참여자에 한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함.
- KrIGF 워크숍 모집 현황 점검 및 공모 기간 연장
 - o 4월 9일~5월 17일 : 워크숍 공모 기간
 - o 5월 20일~23일 : 제안된 워크숍 평가
 - o 5월 26일 :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제36차 회의)
 - KrIGF 프로그램 검토 (워크숍 및 트랙, 튜토리얼 등) -
 - KrIGF 슬로건 논의
 -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요청 논의
 - 인터넷 생중계 방안 논의
 - KrIGF 포스터 디자인 검토
 - 문자통역 방안 검토
 - 서포터즈 운영 방안 검토
 - o 6월 21일 :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제37차 회의)
 - KrIGF 프로그램 준비 진행상황 검토
 - 개회식 및 축사 검토
 - 서포터즈 모집결과 보고
 - 생중계 사전준비 보고
 - 영한 통역 섭외 보고
 - 문자통역 경과보고
 - UN IGF 세션 참여 검토
 - o 7월 5일 : 행사 개최
 - o 8월 30일 : 프로그램위원회 6차 회의 (제38차 회의)
 - KrIGF 결과 보고
 - 행사 평가

3) 사무국

○ 2019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정길원,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박은하,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김학진,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박정하,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염유빈,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서포터즈)

- 고은비, 이화여자대학교
- 전은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김윤희,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 김혜진, 이화여자대학교
- 신지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 임 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 전혜빈,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 이선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 주 민,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 황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기존에 페이스북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개인 계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KrIGF의 공식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함.
- 페이스북 그룹 : <https://www.facebook.com/groups/igf.kr/?ref=bookmarks>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rigf.kr/>

5) 유튜브 채널 개설 및 KrIGF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

- 과거에도 KrIGF 행사를 생중계하고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왔지만, 매해 담당자 및 생중계 채널이 달라지고, 아카이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과거에 촬영되었던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S-Tn-Ibkvu6ngPdhFQ0bA>

6) 문자통역

-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속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행사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함.
- 사회적 협동조합인 AUD(<http://www.sharetyping.com/>)의 문자통역 서비스 이용.

3. 프로그램

- 2019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로서의 인터넷, 기초 지식의 이해(Tutorial) 등 4개 트랙으로 8개의 워크숍, 2개 강의 세션, 1개의 공청회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랙 1(소회의실 1)	트랙 2(소회의실 2)	트랙 3(소회의실 5)	트랙 4(소회의실 6)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로서의 인터넷	기초 지식의 이해 Tutorial	
시간	내용			
09:30~ 10:00	등록			
	개회식(대강당)			
10:00~ 10:45	<input type="checkbox"/> 사회: 오병일(KrIGF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진보네트워크, 활동가) <input type="checkbox"/> 개회사(초대인사말) - [학계] 이동만(KIGA, 위원장/KAIST, 교수) - [산업계] 신중현(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협회장) - [시민사회] 손재원(고려대학교, 학생) - [기술계] 한선영(건국대학교, 교수) - [공공계] 허해녕(KISA, 인터넷기반단장)	<input type="checkbox"/> 축사: - 이진수(과기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 노명선(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10:45~ 11:00	휴식			
	Youth 세션: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11:00~ 12:30	<input type="checkbox"/> 사회: 이동기(UNIST,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발제: 이나경(계명대학교) <input type="checkbox"/> 패널: - 민무홍(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구부승(데오릭스, 컨설턴트) - 김민성(방어진고등학교, 학생) - 조윤이(부산진여자고등학교, 강사) - 최선호(경북대학교,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사회: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input type="checkbox"/> 발제: - 김경곤(고려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 오주형(KISA, 보안기술확산팀장) - 이현정(코스콤, 정보보안팀) - 김경호(S-Oil, 정보보안팀)	<input type="checkbox"/> 사회: 이광석(교수) <input type="checkbox"/> 발제: 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input type="checkbox"/> 패널: - 이성종(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 -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 최영미(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	<input type="checkbox"/> 사회: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발제: 이정민(KISA, 인터넷주소정책팀장) <input type="checkbox"/> 패널: - 강건란(아주대학교, 교수) - 이영음(한국방송대, 교수)
12:30~ 13:30	점심 식사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SDG)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오픈데이터 튜토리얼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13:30~ 15:00	<input type="checkbox"/> 사회: 원다인(중앙대학교, 학생) <input type="checkbox"/> 발제: 김소희(Mount Holyoke College, 학생) <input type="checkbox"/> 패널: - 배혜민(연세대학교, 학생) - 유하선(전북대학교, 학생) - 황예림(숙명여자대학교, 학생) - 김태은(KISDI, 부연구위원)		<input type="checkbox"/> 사회: 강건란(아주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 김상민(가비아, 차장)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전용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nput type="checkbox"/> 강사: - 박조은 개발자 (국민참여 데이터 분석 튜토리얼) - 박지환 변호사 (국민참여 데이터 라이선스 튜토리얼)

15:00~ 15:15	휴식			
15:15~ 16:45	함께하는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 접근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중량제 상호접속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의 이해
	<input type="checkbox"/> 사회: Jia-Rong Low(ICANN) <input type="checkbox"/> 패널: - Bryan Tan(Past President, ISOC Singapore) - 윤복남(KIGA, 주소분과의장) - 김예슬(KrIGF, 위원)	<input type="checkbox"/> 사회: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input type="checkbox"/> 패널: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 김승주(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nput type="checkbox"/> 사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발제: 박경신(고려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 이희정(고려대학교, 교수) - 최민오(보안컨설턴트) - 송봉화(네티스, 대표) -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Fellow)

- 각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결과는 [4. 워크샵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워크샵1 : 특별 Youth Session :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 인터넷이 현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
○ 워크샵2 :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
○ 워크샵3 :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 플랫폼 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현 상황에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
○ 워크샵4 :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SDG)
- 빈곤국가에 인터넷 보급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력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의 달성과 관련성을 토의하고 또한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논의
○ 워크샵5 :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 도메인 등록 정보 수집 및 공개에 대한 사유, GDPR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수단, 개인정보 성격의 WHOIS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WHOIS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
○ 워크샵6 : "Working Together-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Governance"
-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소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

<p>○ 워크샵7 :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해 단순히 정책 결정자나 기술자가 아닌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고민 할 수 있도록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논의
<p>○ 워크샵8 :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 업계, 학계, 망사업자의 목소리를 통해 망중립성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망중립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
<p>○ 2단계 숫자 도메인 도입정책 공개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만든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정책(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p>○ 튜토리얼1 :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민참여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고 참관하면서 오픈데이터의 가치와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함
<p>○ 튜토리얼2 :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프라이버시 문제, 윤리적 가치판단 책임 소재,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위험과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4. 워크숍 세부내용

세션명	워크숍1. Youth Session: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이동기(UNIST)	발제	이나경(계명대학교)
	패널	민무홍(고려사이버대학교)		구부승(데오릭스)
		김민성(방어진고등학교)		조윤이(부산여자고등학교)
		최선호(경북대학교)		

<p>논의 세부 내용</p>	<p>◎ 인터넷에서 파생된 특성은 연결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활용 방법 및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동시에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임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함</p> <p>◎ 세대별 인터넷의 도입 환경 및 사용 과정이 다르므로, 각 격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책적인 교육 및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p> <p>◎ 인터넷 사용이 가지고 오는 잠재적인 문제점의 경우, 개인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에 지속적인 모색이 가능함</p> <p>◎ 인터넷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적 결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제도적 개선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벌어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음</p> <p>◎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양한 세대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Youth Session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함</p> <p>◎ 대한민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음</p> <p>◎ 인터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에서 확장성과 발전성을 보이며 문화로 정착하는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또한 인터넷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를 진로 교육에서 체감하고 있음</p> <p>◎ 스마트워치 및 시스피커와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삶의 질은 향상되었음을 느끼나, 개인이 막연하게 개인정보 침해과 악용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부가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p> <p>◎ 인터넷에서 얻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은연 중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환경에서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는 있지만 그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을 느낌</p> <p>◎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과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제로 많은 기술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었음</p> <p>◎ 온라인에서 사용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도 있었고, 이에는 경험 공유 시에 필요한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됨을 알 수 있음</p> <p>◎ 인터넷의 연결 가능성은 때로는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연락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쉽게 공유되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p> <p>◎ 다양한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지지만, 반대로 편향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짐</p>
-------------------------	----------------------------------------------------------------------------------------------------------------------------------------------------------------------------------------------------------------------------------------------------------------------------------------------------------------------------------------------------------------------------------------------------------------------------------------------------------------------------------------------------------------------------------------------------------------------------------------------------------------------------------------------------------------------------------------------------------------------------------------------------------------------------------------------------------------------------------------------------------------------------------------------------------------------------------------------------------------------------------------------------------------------------------------------------------------------------------------------------------------------------------------------------------------------------------------------------------------------------------------------------------------------------------------------------------------------------------------------------------------------------------------------------------------------------------------------------------------------------------------------------------------------------------------------------

- ◎ 인터넷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자각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실제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에 의도적으로 마스킹처리를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더욱 보완이 필요함
- ◎ 이 시대에 사용자들의 정보는 새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근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차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기업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예: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글 작성 방법은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음)
- ◎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무심코 누르던 '동의' 버튼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를 인지하는 개인은 많지 않은 것처럼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함
- ◎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표준 시각은 비교적 부정적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명백하게 부족함으로 개인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반적인 환경과 인프라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음
- ◎ 실제로 인터넷 뱅킹이 발전하더라도,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문을 닫는 4시 이후에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
- ◎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계좌 개설을 위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지만, 아쉽게도 사회 속에서 학생 시각에서의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이는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였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 과도기적인 방법인 휴대사용의 제한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안겨주므로, 무조건적인 차단 혹은 제한보다도 보다 합리적이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하며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 제안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협의모델에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야하며, 의견을 내는 것에는 성별,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세대와의 만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인터넷이 발전할 수 있음

세션명	워크샵2.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최은창 (Fellow)	발제	김경곤 (고려대학교, 교수)
	패널	오주형 (KISA, 보안기술확산팀장)		이현정 (코스콤, 정보보안팀 과장)
		김경호 (S-Oil, 정보보안팀 차장)		

논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두 주제가 워크샵에서 언급되고 있음. • 산업,경제적으로 굉장히 파급이 크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이 주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되고 있음. •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음. • 김경곤 교수 발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점에 대한 설명.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기술과 공격 기술 동향 소개. • 최은창 fellow 발표: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Malicious AI Report 소개.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소개. AI의 양날의 칼에 비유하며 유용성과 위험성을 이야기. • 오주형 KISA 팀장 발표: AI의 긍정적인 효과, 그중 하나인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발표. • 이현정 과장 토론: 금융증권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분야가 매우 많음. 시장감시팀, 이상징후 탐지, 로봇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보안에서도 활용하고 있음. • 김경호 차장: 공격자와 방어자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p>[김경곤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이 2016년도에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회장이 언급으로 전 세계 대중화가 되었고,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 사건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다가 왔음. <p>[오주형 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는 전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85%가 AI를 활용할 것이라는 언급. <p>[최은창 Fellow 토론 질문]</p> <p>해외 전문가들의 이론은 AI를 통한 사이버 어택 자체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상. AI를 활용한 새로운 위협들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확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p> <p>[김경곤 교수]</p> <p>인공지능이 보안 쪽과 연관되는 것은 성능, 속도 문제인데,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방어는 공격자들이 더 어렵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도록 회피하는 측면이 있음. 인공지능 활용한 공격 트렌드는 앞으로 지속될 트렌드이고 이것은 정말로 시간, 성능 차이의 문제로 연구가 기대되지 않을까 함.</p> <p>[오주형 팀장]</p> <p>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공격에 AI를 쓴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를 정리가 됨. 정확도,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옥스포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타당함. 하지만 AI보다 더 위험한건 모든 것이 연결되는 IoT, 5G시대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함. 클라우드가</p>

나오고 나서 인프라 가상 관련해서 해커들이 공격을 하고 있음. AI랑 클라우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위협적이나?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함. 다시 AI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AI가 해커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 모든 신기술이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위협적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 AI가 적용됐을 때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최은창 Fellow] 누가 공격을 했는지 정말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현정 과장]

실제 공격을 탐지하는 게 포커싱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머신러닝을 돌려서 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일정 패턴이 있으면 잡아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하지 않음.

[최은창 Fellow] AI 공격으로 한 건지 아닌 것인지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김경호 차장]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측면에서 공격자가 AI를 쓰는 다른 것을 쓰든, 과정을 쫓아가면 동일하다고 생각. 패러다임이 기존에 기계가 잘하고 반복적이고 특징을 찾는 것에 대해서 AI가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

[플로어 질문]

유인태. AI 관련해서 사이버 공격에 관련해서 합의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위협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궁금.

[최은창 fellow]

사이버 범죄, 보안,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에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UN 차원에서도 정부대표들이 모여서 국제법상 사이버에도 적용시킬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음. 정치학적으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 국제정치를 보면 회색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힘, 입김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합의할 때 큰 국가가 아닌 이용자라든지 IT 기업들이 합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포럼을 만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림.

[플로어 질문]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 실제적인 AI에 관한 침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침해사건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구별되는 사례들이 있었는지.

[오주형 KISA 팀장]

해킹 과정이 정보수집, 침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별로 AI가 적용되는 게 있을 것. 정보수집하는 것들을 사람이 계속 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보다는 자동화된 AI를 써서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려움.

[최은창 Fellow Closing]

결국 AI와 AI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케일과 속도, 정확도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 하고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규칙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음. 크게 보면 AI 거버넌스라는 어떤 규제 테마가 있으며, 그 속에서 영국인들이 말하는 트랜스포먼티브 AI가 있음.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행동, 전쟁 무기에 사용되는 AI 이런 식의 접근들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음.

세션명	워크샵3.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패널	이성종(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최영미(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		

논의 세부 내용	<p>김종진 부소장은 온라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워크, 호출형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각 노동 등 플랫폼 노동의 종류를 설명하고,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노동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라고 짚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전체 노동자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없고, 그들을 위한 보호체제 역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해외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p> <p>김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에는 특히 초저숙련 일자리가 많고, 따로 대단한 혁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이 디지털화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그들을 보호해왔던 노동의 권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적어도 안전, 보건, 사회 보장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 교수의 사회로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플랫폼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p> <p>패널로 참석한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산재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곧 거래비용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가 노사관계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사회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팀장이 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노동자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시장을 대체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 개발비용을 들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수익 모델이라고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매우 경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논의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p> <p>이어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최영미 대표는 현 시점은 정부와 기업은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며, 노동 당사자들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협동조합을 만든 계기를 노동자가 소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파편화된 노동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며,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기존의 플랫폼 노동조직이 라이더, 대리운전 등 남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왔던 부분을 짚으며 여성 노동자, 특히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나설 것이라 밝혔다.</p> <p>마지막으로 발제자인 김종진 부소장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사회적 제도가 바뀔 필요성과 함께 이 사회와 사회 구성원, 플랫폼 노동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	----------------------------------------------------------------------------------------------------------------------------------------------------------------------------------------------------------------------------------------------------------------------------------------------------------------------------------------------------------------------------------------------------------------------------------------------------------------------------------------------------------------------------------------------------------------------------------------------------------------------------------------------------------------------------------------------------------------------------------------------------------------------------------------------------------------------------------------------------------------------------------------------------------------------------------------------------------------------------------------------------------------------------------------------------------------------------------------------------------------------------------------------------------------------------------------------------------------------------------------------------------------------------------------------------------------------------------------------------------------------------------------------------------------------------------------------------------------------------------------------------------------------------------------------------------------------------------------------------------------------------------------

세션명	워크숍4.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SDGs)			
일시	2019.7.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원다인 (중앙대학교 학생, GP3 Korea)	발제	김소희(Mount Holyoke College, GP3 Korea)
	패널	유하선(전북대학교 학생, GP3 Korea) 김태은(KISDI, 부연구위원)		배혜민(연세대학교 학생, GP3 Korea)

논의 세부 내용	<p>1.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과 SDGs</p> <p>1) 인터넷 보편화를 위한 접속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먼저 경쟁 시장과 가격 책정으로, 2016년까지만 해도 거의 독점적으로 텔레콤 시장을 운영하던 코모로스 텔레콤은 제2 이동통신사(텔마)가 생겨나자 실제로 30%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에는 다양했던 데이터 상품의 종류가 축소된 문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둘째로는 Whatsapp이나 Skype와 같은 OTT나 페이스북의 Free Basics, Wiki Zero 등과 같은 "제로 등급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OTT서비스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제로 등급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2) 부족한 소수어 콘텐츠와 기반시설 문제 해결 방안</p> <p>①부족한 소수어 콘텐츠 먼저 부족한 소수어 콘텐츠와 관련하여, Consultancy GLOBAL.org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ple의 siri나 amazon의 alexa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언어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MIT Press Journals의 Iris Orriss라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술 회사,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등이 모든 언어로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에 글꼴 지원 및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을 번역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참여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②기반시설 문제 해결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통신업체들과 기관들이 취약 지역에 인터넷 보급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위성, 열기구 등 여러 방안을 이용한 사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심사숙고한 국가 광대역 통신망 계획을 수반하는 일관된 리더십을, 규제기관에는 인프라 구조 구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적인 인프라 지도책과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p>3)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 IT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협력적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IT 기업은 기술 개발,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어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GOOGLE, MICROSOFT, FACEBOOK 등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헌신, 국가 발전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인지, 기술개발 단계와 같은 계몽된 정책과 규제 조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언급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의 페이스북 넷 중립성(사용자가</p>
----------------	----------------------------------------------------------------------------------------------------------------------------------------------------------------------------------------------------------------------------------------------------------------------------------------------------------------------------------------------------------------------------------------------------------------------------------------------------------------------------------------------------------------------------------------------------------------------------------------------------------------------------------------------------------------------------------------------------------------------------------------------------------------------------------------------------------------------------------------------------------------------------------------------------------------------------------------------------------------------------------------------------------------------------------------------------------------------------------------------------------------------------------------------------------------------------------------------------------------------------------------------------------------------------------------------------------------------------------------------------------------------------------------------------------------------------------------------------------------------------------------------------------------------------------------------------------------------------------------------------------------------------------------------------------------------------------------------------------------------------------------------------------------------------------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한되는 것) 문제에서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단원 활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4) 무료 인터넷 사례와 한계 : 프로젝트 룬(Project Loon)

-프로젝트 룬이란 빈곤국가의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여, 통신장비를 실은 열기구를 상공에 띄워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일단 열기구가 지정 위치에서 벗어나면 신호가 끊길 수 있고 또 성층권 풍류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와 경제성장(전자상거래, 건강정보, 농산물 시세 정보, 날씨 정보)

국가의 빈곤감소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상업의 성장이며, 현재 전세계의 상업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은 IT 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자본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금융 자본과 금융 서비스 효율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빈곤국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격차와 교육 부족, 3G 네트워크 사용 비중으로 인해 ICT 사용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을 비롯한 광물 활용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인권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3. 인터넷 빈곤과 민주주의

1)인터넷 접속이 확대 되어도 정치적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는 빈곤 국가들이 개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가?

Private Secto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를 촉구하는 기구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식 인터넷의 확산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인권탄압 실태에 대한 더 많은 보고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적으로는 인터넷 검열이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례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2)인터넷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 국가에서 하나의 기업 혹은 기관이 인터넷 보급을 독점하는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권 유린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극단적인 계정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로부터의 정보 습득과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OICA는 인터넷 보급에 대한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나, 인터넷 빈곤 국가들의 정보 활용 교육에 대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중앙집권적인 인터넷 보급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라면 아무도 블록 체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가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부분도 검열 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조사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3)인터넷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의 평가와 차등대우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개인정보 보호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제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장치를 구성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올바른 소셜 미디어

의 선택도 중요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4)가짜 뉴스는 누가 막아야 하며, 판별을 위한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악용하는 아프리카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등에서는 “미디어의 민주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초래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도 가짜뉴스라며 단속합니다. 아직 정보 활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용이 허위성 확인, 팩트 체크를 넘어서, 특정 지역, 종교 혹은 국민에 대한 혐오 및 인종차별주의와 접합된다면, 주로 인종, 종교 및 성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많이 배포되는 아프리카에선 자극적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가르쳐져야 합니다.

페이크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기술적 방법과 비기술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기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술적 접근인 인공지능 기반 탐지, 시맨틱 기반 탐지, 이상 확산 패턴 감지 기법이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4. 인터넷 보급과 아동, 교육, 여성 empowerment

1) 인터넷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그 한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도 교육용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국 아동들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례로 OLPC(One Laptop per Child)에서는 저렴한 단가를 맞추기 위해 튼튼하지 않은 장치가 만들어졌고, 교육 콘텐츠 없는 인터넷 보급은 인터넷이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하드웨어에만 모비스테이션은 하드웨어에만 치중하여 교육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2) 인터넷 교육이 현장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MOOC의 한계와 해결방안

MOOC는 수료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양질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MOOC가 혁신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 제공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는 수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학 강의를 수강하듯 숙제도 제출하고, 조교에게 화상 상담도 받고,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토론하며 교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료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빈곤 국가 아동들의 기초수요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연구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일 것입니다.

3) 빈곤국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을 통해 여성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ICT 기술을 통해 여성 인권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여성 인권 제고의 필요성도 커져가는 반면 이를 여성의 교육 ODA에 활용하는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4) 대한민국 ODA와 인터넷 교육의 보급

우리나라는 ICT 기술을 이용해 ODA를 진행하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학교나 센터 건립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대상자들도 직업훈련이나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인터넷과 교육 ODA를 접목시킨 사업의 범위가 넓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 ODA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교육 파트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바로 ‘교육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세션명	워크샵5.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일시	2019.7.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강경란(아주대)	발제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패널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신용우(국회 입법조사처)
		김상민(가비아)		

논의 세부 내용	<p>① ICANN 커뮤니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DPR 관련 WHOIS 시스템 개선안 내용 - 현재 1단계(phase 1)로 WHOIS 운영을 위한 데이터 처리 목적 및 처리 범위가 정의되었고, 2단계(phase 2)로 개인정보 성격을 지니는 비공개 WHOIS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및 관련 인증 절차를 논의하려고 함</p> <p>② GDPR 관련 WHOIS 이슈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위 WHOIS 이슈에 관한 논의는 gTLD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논의 내용은 .kr 등 ccTLD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 규정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WHOIS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내적 관점에서 위 이슈를 검토할 필요 있음</p> <p>③ 도메인대행자(Registrar)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등록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Registrar는 직접 도메인 등록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이들 기관의 관점에서 도메인이름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인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p> <p>④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바라본 WHOIS 등록인정보의 수집, 공개 이슈 - WHOIS 등록인 정보는 공개 WHOIS 서버에 통해 조회될 수 있으나, 그 외 법원의 영장,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자료제공(가입자정보), 형사소송법상 인터넷주소관리기관(registry)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해서도 등록인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임. 전체적인 법제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WHOIS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함</p> <p>각 발표문 참조(http://igf.or.kr/2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HOIS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전응준) 2. GDPR 관련 WHOIS 이슈에 대한 국내적 관점의 검토 (윤복남) 3. 도메인대행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김상민) 4.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개인정보 보호 (신용우)
-------------------------	-------------------------------------------------------------------------------------------------------------------------------------------------------------------------------------------------------------------------------------------------------------------------------------------------------------------------------------------------------------------------------------------------------------------------------------------------------------------------------------------------------------------------------------------------------------------------------------------------------------------------------------------------------------------------------------------------------------------------------------------------------------------------------------------------------------------------------------------------------------------------------------------------------------------------------------------------------------------------------------------------------------------------------------------------------------------------------------------------------------------------------------------------------------------------------------------

세션명	워크샵6. Working Together – 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Governance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Jia-Rong Low (ICANN)	발제
	패널	Mr Boknam Yun (KIGA)	Ms Sandra Kim (Interpreter)
		Mr Bryan Tan (ISOC Singapore)	

<p>논의 세부 내용</p>	<p>Speakers shared their own experiences applying the multistakeholder model of Internet governance at the national level in their own countries (i.e. South Korea and Singapore). They also shared their experiences in engaging the wider community, including general Internet users.</p> <p>Jia-Rong highlighted the difference between governance of the Internet versus governance on the Internet. Traditionally, Internet Governance meant only the former, as the latter included various issues such as content which sits on the Internet but is not of the Internet itself. Jia-Rong also shared the background behind how the multistakeholder model came about, and how it became applied to Internet Governance platforms including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the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RIR), as well as ICANN. The multistakeholder model is directly associated with Internet Governance, but it comes with its challenges such as the need to balance inclusivity and accountability, which are resource intensive, while pushing policies and standards forward to keep up with evolving technologies and needs.</p> <p>Boknam highlighted KIGA's history and structure, and how KIGA has been working in recent years towards having changes made to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to better recognize 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to Internet governance. In terms of engaging the wider community, Boknam shared that a challenge for KIGA was to engage general Internet users.</p> <p>Bryan shared that although ISOC (Singapore Chapter) is young and still growing, it is fast becoming recogniz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as being representative of general Internet users in the country. He shared concrete examples of ISOC Singapore's efforts to engage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on various issues they have concerns on, such as when the government drafted new laws to license online news websites or tackle fake news. What helped made their engagements effective was that ISOC Singapore would typically start with capacity development to help stakeholders understand an issue first. This could be in various forms, like talks, dialogues, and training sessions.</p> <p>Following these capacity building sessions, ISOC Singapore organizes consultation to provide input where government regulation is being drafted. The government is</p>
-------------------------	----------------------------------------------------------------------------------------------------------------------------------------------------------------------------------------------------------------------------------------------------------------------------------------------------------------------------------------------------------------------------------------------------------------------------------------------------------------------------------------------------------------------------------------------------------------------------------------------------------------------------------------------------------------------------------------------------------------------------------------------------------------------------------------------------------------------------------------------------------------------------------------------------------------------------------------------------------------------------------------------------------------------------------------------------------------------------------------------------------------------------------------------------------------------------------------------------------------------------------------------------------------------------------------------------------------------------------------------------------------------------------------------------------------------------------------------------------------------------------------------------------------------------------------------------------------------------------------------------------------------------------------------------------------------------------------------------------------------------------------------------------------------------------------------------------------------------------------------------------------------------------------------------------------------------------------------------------------------------------------------------------------------------------------------------------------------------------------------------------------------------------------------------------------------------------------------------------------------------------------------------------------------------------------------------------------------------------------------------------------------------------------------------------------------------------------

present during such consultation, and has shown appreciation as dialogue is fostered. While the government does not always incorporate the input, trust is built all-round through the dialogue.

By placing issues first before interest groups, ISOC Singapore has promoted inclusivity as much as possible, and avoided excluding or alienating any particular group from discussions. It believes a multistakeholder approach means that while anyone concerned should be allowed to provide input, it recognizes that not all input can realistically be taken up eventually given finite time and resources available.

On engaging the wider local community, Bryan mentioned a case where Internet users faced legal action for circulating controversial content online. ISOC Singapore helped by running a simulation exercise for those concerned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they could do. A Korean participant asked for details on how the simulation exercise was run. Bryan explained that scenarios were set up in a session where participants roleplayed to explore and understand better how they could approach the situation.

Yeseul called for more youth leaders to come forward, and encouraged them to join programs like the Asia Pacific Internet Governance Academy (APIGA). Globalization means Internet governance also naturally becomes globalized. While the multistakeholder model has its weaknesses, it is the closest model suitable for Internet governance. Learning from ISOC Singapore's experience, Yeseul also shared her hope that ISOC Korea could do more in helping to engage the wider Korean community.

세션명	워크샵7.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조지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발제
	패널	오병일(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논의 세부 내용	<p>각 패널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 문제의식과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이버 보안 또는 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주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p> <p>권석철 대표는 민간업체 실무를 예시로 들며, 해킹 사고에 있어 본인들의 역할이 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방부나 민간업체들을 불러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자료가 활용되고 위해선 각 부처와 기관 등과 공유가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된 정보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승주 교수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영역에서 인력과 기술력 때문에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류체계를 갖추어 어떤 데이터가 국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데이터가 기밀인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가야 논의가 발전적으로 갈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앞에서 나온 지적들을 토대로, 국정원이 전체를 담당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원으로, 그 영역과 직무를 명확히 명시한 다음에야 그 협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병일 대표는 국정원 비판은 국정원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정원 개혁과 해외정보기관으로써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권석철 대표는 위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최소한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다른 기관들과 투명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김승주 교수는 추가적인 의견으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곳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면 실행력과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권을 맡기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주된 분위기인 사고가 나면 쉬쉬하는 문화를 지적하며, 현재로서 모든 공격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원상태로 빠르게 복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p> <p>결론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전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그 컨트롤타워에 집행력과 실행력 등의 실질적 권한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투명한 정보공유와 개념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산의 필요성에는 패널들 모두 동의했습니다.</p>
----------	-------------------------------------------------------------------------------------------------------------------------------------------------------------------------------------------------------------------------------------------------------------------------------------------------------------------------------------------------------------------------------------------------------------------------------------------------------------------------------------------------------------------------------------------------------------------------------------------------------------------------------------------------------------------------------------------------------------------------------------------------------------------------------------------------------------------------------------------------------------------------------------------------------------------------------------------------------------------------------------------------------------------------------------------------------------------------------------------------------------------------------------------------------------------------------------------------------------------------------------------------------------------------------------------------------------------------------------------------------------

세션명	워크샵8.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증량제 상호접속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패널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송봉화 (네티스, 대표)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엄열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논의 세부 내용	<p>인터넷에 대해서 UN과 같은 기관에서도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어 각 나라별로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힘없는 개인도 국가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에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등의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평등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p> <p>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 없이 정보를 옆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터넷의 구동 원리이자 망 중립성에 해당합니다.</p> <p>망 접속료는 이용자 개개인의 전자기기를 인터넷 망에 연결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망 이용료는 발신,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에 모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인이 더 이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 이용료의 개념은 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p> <p>앞으로 인터넷의 구동 방법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특정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구동 방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역시 망 중립성 규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망 시장의 경쟁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별 인터넷 접속료입니다. 2018년 상호접속료를 비교해 본 경우, 한국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한 상황에서 제로레이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p> <p>제로레이팅은 증량제와 데이터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소비자가 2명 중 1명이라는 2017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혹은 콘텐츠를 선택할 때에도 제로레이팅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하여, 5G는 기존의 1G 내지 4G와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5G를 사용하게 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G를 쪼개어서 고속레인과 일반레인의 차등을 둘 경우, 일반레인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들은 고속레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인터넷도 프리미엄 인터넷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 카카오톡 등의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원이 늘어난다고 하여 고속 라인을 구축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p>-송봉화(네티스, 대표): 5G를 경직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p>
----------------	--------------------------------------------------------------------------------------------------------------------------------------------------------------------------------------------------------------------------------------------------------------------------------------------------------------------------------------------------------------------------------------------------------------------------------------------------------------------------------------------------------------------------------------------------------------------------------------------------------------------------------------------------------------------------------------------------------------------------------------------------------------------------------------------------------------------------------------------------------------------------------------------------------------------------------------------------------------------------------------------------------------------------------------------------------------------------------------------------------------------------------------------------------------------------------------------------------------------------------------------------------------------------------------------------------------------------------------------------------------------------------------------------------------------------------------------------------------------------------------------------------------------------------------------------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오(보안컨설턴트):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은 비합리적인 정상 기준을 규제를 통해 도입시킴으로써 생태계 전반을 저하하고, 망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망 중립성 폐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의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로 보내는 트래픽 양만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발신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종량제라는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량에서 정산 기준이 변경되게 되어 개정 목표와 동떨어지게 됩니다.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상호 발전의 측면과 다각도로 보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이가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본 나라가 칠레와 네덜란드로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기에 사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대하여 이의 문명사적 역할에 공감하고, 이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련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의 규모나 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를 전제하고 규칙을 새로 짤 것인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규칙을 짤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플로어(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망중립성과 5G네트워크에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봉화(네티스, 대표): 패스트 라인(fast line)과 일반 라인에 모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라인을 먼저 수리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제로레이팅이 해외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하여, 규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사가 자사 제로레이팅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제로레이팅을 할지, 패스트 라인을 할지에 대한 논의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망 시장이 매우 경쟁이 낮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망중립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를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션명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윤복남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발제	이정민 팀장(KISA)
	패널	강경란 교수(아주대)		
		이영음 교수(한국방송대)		

<p>논의 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숫자도메인이란 2단계 도메인이 숫자(및 하이픈(-))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말함(예 : 1588.kr, 118.한국) - 해외는 '01년부터 허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06년 2단계 .kr 도메인 도입당시 ENUM 서비스(하나의 식별번호로 팩스, 전화, 이메일 가능)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였음. 단, 3단계 숫자도메인(예 : 118.or.kr)은 초기부터 숫자도메인 등록이 허용됨 ○ KISA는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산·한·연 연구반을 구성·운영('19.2월~4월)하여 숫자도메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함 * 연구반 구성(총9명): 정부1명, 공공1명, 학계2명, 법조계1명, 산업계2명, 상표전문가2명 - 또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함('19.5월) ○ 주요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의 등록 제한 : 일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119, 120 등 10Y,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들의 혼란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한하여 등록 허용 필요 -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장기간 사용해 온 100 등 10Y계열 번호는 등록 제한 하지 않되, 국민혼란 방지를 위해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초기 약 2개월 간 해당 기관에게 한시적으로 우선등록 부여 필요 ② 욕설 등 비속어 숫자도메인 등록 제한 :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 제한 기준의 모호성 문제, 3단계 .kr도메인 등록 시 숫자 비속어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 사례 등을 고려 등록 제한 불필요 ③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 제한 :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에서도 전화번호 자체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휴대전화번호 및 전화번호는 영구적 독점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번호만 등록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으로 법적 조치 가능 - 또한,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제한이 없는 점도 고려 필요 ④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등록 제한 :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등록 제한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위반 시 말소 등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필요 ⑤ 우선등록 정책 적용 범위 : 상표권자에게 우선등록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범위) 순수 숫자만으로 등록한 상표구너만 인정할 필요 - (우선등록자 선정방식) 우선등록 기간 복수의 상표권자가 도메인 신청 시 우선권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첨방식으로 결정 필요 - (기존 3단계 도메인 등록자) 현재 3단계 숫자도메인(119.co.kr) 등록자에 대해서는 우선등록 기회 미부여
-------------------------	------------------------------------------------------------------------------------------------------------------------------------------------------------------------------------------------------------------------------------------------------------------------------------------------------------------------------------------------------------------------------------------------------------------------------------------------------------------------------------------------------------------------------------------------------------------------------------------------------------------------------------------------------------------------------------------------------------------------------------------------------------------------------------------------------------------------------------------------------------------------------------------------------------------------------------------------------------------------------------------------------------------------------------------------------------------------------------------------------------------------------------------------------------------------------------------------------------------------------------------------------------------------------------------------------------------------------------------------------------------------------------------------------------------------------------------------------------------------------------------------------------------------------------------------------------------------------------------------------------------------------------------------------------------------------------------------------------------------------------------------------------------------------------------------------------------------------------------------------------------------------------------------------------------------------------

- KriGF 참석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숫자도메인 등록 개시 예정
- 우선등록기간 중 미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 우선등록과 분쟁조정은 별개의 사안, 도메인이름의 미등록만으로 상표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타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할 시, 소송에 의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말소 절차가 있는지?
 -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도록 할 것임. 문제 발생 시 목적이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간소요 불가피. 이유 불문한 일률·신속한 정지조치는 면밀한 검토와 의논이 필요한 법 개정사안임
- 개보법상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수집 과정의 주민번호임,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개보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인터넷주소정책에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고민 필요
 -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만 금지. 말소 경고 확인 후에만 등록되도록 절차 만들 것. 인주법 내에 이의 제기 시 말소 정책 마련할 것

세션명	튜토리얼1.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일시	2019.7.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박지환	발제	박조은(개발자)
	패널			

논의 세부 내용	<p>(1) 깃허브 사용법 및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 크롤링 결과 소개 및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 분석 사례 소개 및 시연</p> <p>(2) 데이터 라이선스 초안 소개</p> <p>세부 발표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체</p> <p>(1) 데이터 분석</p> <p>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I1DkjhubbVux38PIVkt7LgGY58TIQlpdUMZwvWo-bU/edit</p> <p>(2) 데이터 라이선스</p> <p>https://docs.google.com/document/d/1PoVHjcz_SwN_9uboxH4YVW8ngubchYGYVlgFiQNOri/edit</p> <p>이터분석 활성화를 위한 이용약관 수정안 초안 (1차 2019. 6. 28. 버전)</p> <p>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p> <p>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정부혁신1번가"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 -</p> <p>개정안</p> <p>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p> <p>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고, 정부혁신 1번가는 회원 게시물을 정부 내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및 처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누구나 컴퓨터로 해당 게시물을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및 개작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같은 권리를 허락합니다.</p> <p>이하 생략 -</p>
----------------	---------------------------------------------------------------------------------------------------------------------------------------------------------------------------------------------------------------------------------------------------------------------------------------------------------------------------------------------------------------------------------------------------------------------------------------------------------------------------------------------------------------------------------------------------------------------------------------------------------------------------------------------------------------------------------------------------------------------------------------------------------------------------------------------------------------------------------------------------------------------------------------------------------------------------------------------------------------------------------------------------------------------------------------------------------------------

세션명	튜토리얼2.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발제	최은창
	패널		

논의 세부 내용	<p>-AI 활용의 유용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지구촌 빈곤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저개발국가의 공중보건 활동.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도 사용되고 있음</p> <p>① '유익한 인공지능 컨퍼런스(Beneficial AI 2017 conference)'는 아실로마 원칙을 발표하여 AI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전제조건을 논의하였음</p> <p>② 국제정보통신연합(ITU)이 2016년부터 시작한 AI for Good 은 기술계, 학계, 정부간 기구 등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위해 활용하도록 이른바 '공유재로서 인공지능(AI for Commons)을 제안.</p> <p>③ 유엔 글로벌 펄스(Global Pulse) 우간다 지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난민의 유입, 재난 발생 파악,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처에 활용하고 있음</p> <p>④ 말라리아 진단, 기후변화 파악과 대응, 난민 캠프의 이재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에 사용될 수 있음(Stanford, ETH의 연구로 개발된 알고리즘)</p> <p>-AI 활용의 해악사례: ① 해악적 AI사용 사례: 디지털 안보(머신러닝에 의한 해킹, 적대적 머신러닝에 의한 인식오류) 물리적 안보(테러리스트의 드론 공격) 정치적 안보(개인정보를 파괴하는 프로파일링, 감시, 자동화된 허위정보 캠페인)</p> <p>② 자동화된 전투무기의 개발 : 구글의 메이븐(Maven)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p> <p>③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남용: 중국의 Skynet 사례, 이용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는 페이스북의 사진 속 얼굴 인식, 아마존 리코그니션(Amazon Rekognition)</p> <p>④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결정 시 사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COMPAS Recidivism Algorithm)에 반발한 Loomis v. Wisconsin 위스콘신주 소송사건,</p> <p>⑤ 예방적 방법에 사용되는 프레드폴 알고리즘의 질낮은 데이터.</p> <p>-블랙박스 문제: AI에 거는 기대와 신뢰도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오류, 부적절한 데이터셋, 편향성, 오작동, 남용 등의 현실적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음 AI 설계에 수많은 패러미터와 데이터가 사용되지만 그 작동방식은 불투명하다는 문제. 1) 알고리즘 설계의 복잡성 2)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 질낮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관행은 판단의 정확성에 문제를 일으킴. AI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도 그 작동방식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효용성만이 부각되는 역설적 상황 발생</p> <p>-AI 알고리즘의 책무성, 공정성, 투명성, 포섭이 필요한 이유는? : 인간의 안전, 공정성, 정확성 편향성이 보장되도록 AI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 알고리즘의 작은 오류가 반복되면 사회 전체의 해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p> <p>-AI 윤리 원칙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① OECD는 2019년에 회원국 정부들의 규제가 될 수 있는 AI 원칙을 발표, ② EU연합은 윤리적 원칙들을 규범화하여 AI 기술 분야의 선진국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AI윤리는 이용자 안전이라는 목적만 아니라 국제적 AI 경쟁에서 상대국의 견제라는 성격도 있음. ③ Partnership on AI는 자율규제를 위한 기업들의 연합체로 AI의 안전성, AI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인간과 AI의 협력, AI와 사회적 영향과 공익 등을 연구함.</p> <p>-데이터와 AI 윤리 원칙과의 관계: 데이터는 AI 산업을 위한 원유이며, 알고리즘은 엔진에 해당되므로 데이터의 확보는 매우 중요. 중국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가 특별히 없는 국가라면 데이터의 공급이 쉬워짐. AI 윤리를 위해서는 1) 데이터 거버넌스와 2) 데이터 프로비던스의 확보 3) 설명가능성이 필요.</p> <p>①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신원'의 익명화, 가명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 GDPR '적정성 기준'의 충족이 가능한가?</p> <p>② 데이터 프로비던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 데이터의 근원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계된 구조화된 메타 데이터가 투명해야</p>
-------------------------	-------------------------------------------------------------------------------------------------------------------------------------------------------------------------------------------------------------------------------------------------------------------------------------------------------------------------------------------------------------------------------------------------------------------------------------------------------------------------------------------------------------------------------------------------------------------------------------------------------------------------------------------------------------------------------------------------------------------------------------------------------------------------------------------------------------------------------------------------------------------------------------------------------------------------------------------------------------------------------------------------------------------------------------------------------------------------------------------------------------------------------------------------------------------------------------------------------------------------------------------------------------------------------------------------------------------------------------------------------------------------------------------------------------------------------------------------------------------------------------------------------------------------------------------------------------------------------------------------------------------------------------------------------------------------------------------------------------------------------------------------------------------------------------------------------------------------------------------------------------------------------------------------------------------------------------------------------------------------------------------------------------------------------------------------------------------------------------------------------------------

문제가 생겨도 그 원인을 찾거나 수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음.

③ 설명가능한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기계언어와 인간의 인지능력 사이의 격차는 상당

- AI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해외 정부, 기업(private initiatives), ITU 등 국제기구, 세계경제포럼(WEF)OECD, 연구기관, 기업들은 관점이 다른 이유는? :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때문. AI 윤리가 자율규제로 충분하다는 그룹과 강제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그룹으로 양분되고 있음. 대립적 양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ethics)와 규제(regulations)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그 시사점을 국내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에 참조할 필요
- AI 윤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국내에서도 병행되어야 한다.
- AI 규제정책은 국가마다의 데이터 관련 규제, 활용영역, 알고리즘 개발 등 기술적 여건, 기술 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AI 윤리 정책과 거버넌스는 국제 흐름을 주시하고 인간 중심AI(Human-CenteredAI)을 위해 준수할 조건들에 대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주장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행사 평가

1) 참석자 통계

- 참석인원 : 188명(사전등록 166명/264명(88%), 현장등록 22명(12%))
 - 학계 34명(18%), 산업계 33명(18%), 시민사회 28명(15%), 기술계 12명(6%), 공공계 50명(27%), 일반이용자 31명(16%)

2) 만족도 조사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총 79명 응답)	공공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이용자
	29.1%	11.3%	15.1%	11.3%	5%	25.3%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 경험	있음		27.8%			
	없음		69.6%			
3. 워크숍 만족도 (오전 세션)	워크숍		내용 유익성	시간 적절성		
	워크숍 1 (12명 응답)		83.3%	91.6%		
	워크숍 2 (26명 응답)		84.6%	80.7%		
	워크숍 3 (24명 응답)		95.8%	79.1%		
	2단계 숫자도메인 (12명 응답)		83.3%	83.3%		
4. 워크숍 만족도 (오후 세션)	워크숍 4 (26명 응답)		69.2%	53.8%		
	워크숍 5 (24명 응답)		79.1%	79.1%		
	튜토리얼 1 (21명 응답)		85.7%	76.1%		
	워크숍 6 (10명 응답)		90%	80%		
5. 워크숍 만족도 (오후2 세션)	워크숍 7 (26명 응답)		88.4%	84.6%		
	워크숍 8 (16명 응답)		87.5%	81.2%		
	튜토리얼 2 (18명 응답)		83.3%	66.6%		
	튜토리얼 2 (18명 응답)		83.3%	66.6%		
6. 행사장 및 서비스 만족도	행사장 시설 (76명 응답)		76.3%			
	진행 및 서비스 (76명 응답)		80.2%			
7.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가 뒤쪽에도 있으면 더 좋겠음 - 지방에서 올라올 경우 오늘 장소인 세종대 컨벤션 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음. 접근성을 고려하여 행사 장소 설정이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세션을 개최했으면 좋겠음. 또한 산업계측의 참여가 증대되면 좋을 것 같고, 발제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을 늘려주시길 바라며 일부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토론자는 배제바라며, 발제자 자료 					

	<p>Fact Check도 필요하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강국으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다음에 또 포럼 개최 시 연락 바람 - Youth세션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대학생들도 더 많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 - 토의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Youth Session에서 질문에 답변 시간이 없었으며,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 세션 또한 마찬가지였음 - 참석자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워크샵3처럼 더 넓고 다양한 사회 현황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더 많아졌으면 하며, 워크샵6처럼 포괄적 제목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제목 작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세션의 시간이 다소 짧다는 느낌이 듦, 세션이 쉬는 시간까지 딜레이 되고, 뒤이어 세션 진행이 늦어졌음. 각 진행 세션을 약 10-15분 이상 늘렸으면 좋겠으며 그 이외에는 모두 만족스러움 - 공간이 넓지 않아 질문자 목소리가 듣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으나 여러모로 아쉬웠음 - 소책자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음 - 전반적으로 만족, 유익한 내용으로 패널들의 토론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나, 워크샵4 세션의 경우 패널들끼리 토론 중간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여 집중이 조금 흐려짐 - 진행시간이 1시간 이내였으면 좋겠음 -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해 계기가 되었음 -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것 자료집이 제공 되면 보다 나은 포럼이 될 것 같음 간식도 휴식시간에 제공된다면 좋겠음. 다음 포럼도 기대하고 있음 - 사용자(산업계, 일반근로자)들의 의견분석 (온라인, 설문, 대표 등과의 협의), 신규이슈(국내외 관련 법규 동향) 소개 (종합, 각 분야별) - 발표자료를 웹을 통해 공유해주시길 바람 - 많이 배우고 감 - 홍보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유도 필요, 포럼 발표자료 책자 배포 필요
--	----------------------------------------------------------------------------------------------------------------------------------------------------------------------------------------------------------------------------------------------------------------------------------------------------------------------------------------------------------------------------------------------------------------------------------------------------------------------------------------------------------------------------------------------------------------------------------------------------------------------------------------------------------------------------------------------------------------------------------------------------------------------------------------------------------------------------------------------------------------------------------------------------------------------------------------------------------------------------------------------------------------------------------------------------------------------------------------------------------------------------------------------------------------------------------------------------------------------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o 2019 KrIGF 평가(자체평가결과, 설문조사결과, 예산 등)

- 워크샵 제안이 예년에 비해 저조하였음
 - ▶ 제안서 퀄리티가 낮았으며, 논의할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제안서 제출이 부족하였음
- 제안서 제출 시 패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 제안서 제출시 패널섭외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나, 패널을 미리 섭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 내년에는 사전에 섭외확정은 안되어 있어도 되지만 향후 계획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세션 운영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 워크샵 제안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동제안을 활용해볼 수 있음
- 문자통역은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자의 수는 적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비용 투자 대비 만족도가 높았음
- Youth session을 시작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멘토 및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스태프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
- 현장인력(STAFF)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포터즈에게 더 명확한 역할을 줄 필요가 있음
-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생중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행사장이 단층일 경우 현장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비용절감
 - ▶ 사진사를 쓰지 않고 서포터즈를 통해 사진을 맡길 수 있도록
 - ▶ 노트북 대여를 하지 않고 기관에서 남는 노트북을 Donation 받아 여러분의 노트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기념품과 주차비에서 예산을 줄여서 비용 절감
 - ▶ 명찰과 홍보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KrIGF 개선 방안

- 워크샵 제안 공지 및 홍보 시 다양한 세션 방식의 소개
 - ▶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샵을 진행했으면 함
 - ▶ 라운드 테이블, 워크샵, 튜토리얼, 오픈 포럼 형식을 명시
- 워크샵 패널 구성의 협조 코디네이터를 처음부터 지정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 워크샵 평가 채점 기준 및 배점을 늘릴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프로그램위원회 자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위원 전원이 워크숍 제안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음
- 유튜브 기존의 영상에 대한 편집은 필요 없다고 판단
 - ▶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자막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요약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카카오 AI Lab에 요청
-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위원회가 프로그램 기획에서 포럼 운영까지 모든 것을 맡아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홍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
 - ※ 조직위(고위급, 각 위원회 위원장, 주관기관/후원기관 장, KIGA 조직 장), 프로그램위(프로그램 구성), 운영위(행사 운영, 후원 모집)

6. 결산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원)	예산(원)	비고
행사장 임대료	소회의실1~2, 5~6	4실	-	2,299,000	세종대학교
패널 교통비	세션 패널 교통비 (지방 거주자에 한함)	16명	100,000	1,600,000	
인건비	생중계 담당자 인건비	1식	-	2,720,000	카메라포함
	서포터즈 지원비	10명	100,000	1,100,000	인센티브포함
	현장 지원인력	12명	150,000	1,800,000	교육일 포함(2일)
	영문 번역비	1식	-	1,000,000	예정
장비임차	유·무선 인터넷(KT)	4개	50,000	200,000	
	노트북 대여	10개	200,000	2,000,000	
중식	참가자 중식	300식	6,500	1,950,000	
문자통역	세션별 문자통역비	1식	-	1,100,000	
기념품	참가자 기념품	300개	11,000	3,300,000	
주차권	참석 패널 주차권	50장	15,000	750,000	
홍보물 제작	현수막(외·내부), 배너, 포스터 등	1식	-	3,610,000	
다과 및 음료	다과 및 음료 지원	1식	-	916,200	
사무용품	명찰, 문구류 등 준비	1식	-	2,242,500	
예비비	도메인연장, 콜밴등	1식	-	863,700	위원&패널 저녁 포함
총 소요예산				27,451,400	

※ 후원 현황: 법무법인 한결(100만원), 가비아(100만원), 카카오(250만원), 네이버(200만원); = 700만원

7. 사진





[별첨 1]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별첨 2] 워크샵 및 튜토리얼 보고서